

전북 방문한 김경수 민주 대선 경선후보

“지역주의 넘어, 민주당의 전국적 꿈 이뤄야”

전북지역 당원들과 간담회에서 지지 호소

“이번 대선, 균형발전 위한 중요한 기회

지역 소멸 문제 극복 못하면 미래는 없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오전 전주에서 열린 전북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 문제와 이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당원과 깊은 공감대를 갖고 이번 경선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지역소멸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의 현실은 이제 단순히 살기 좋은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지방의 위기는 결국 수도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고 있다

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로 남아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만 발전시키는 방식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결국 수도권마저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는 전북 지역 청년들이 직장을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을 언급하며, 이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전주의 청년이 군산에 취업하러 가도 방을 얻기 힘들어 결국 서울로 떠난다. 그렇게 수도권에 간 청년들이 결국 돌아올 때는 자신이 인생의 패배자라고 느끼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지역 청년들의 삶과 꿈과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김경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김 후보는 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은 점점 더 쇠락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소멸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들이 서울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

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로 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전국 정당으로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경남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에서 민주당의 입지

를 넓혀왔던 경험을 소개했다. “경남에서 민주당 후보로 두 차례 낙선한 뒤, 2016년 총선에서 김해에서 최고 득표율로 당선되었을 때, 나는 지역주의에 맞서 싸우며 전국 정당의 꿈을 지역에서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역 출신이지만,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을 이끌어갈 수 있음을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후보는 “제 정치의 뿌리는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참여정부 5년을 청와대에서 모셨고, 봉하마을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모셨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출마하고 선거에 뛰어드는 그런 정치를 할 거라고는, 제 인생 계획에 없었던 계획”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기는 경선, 압도적인 대선 승리,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자신이 호남의 사위”라며 전남 임자도에서 태어나서 목포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한 여자 후배와 결혼했다며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남과 전북, 충청, 영남 등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의 차기 정부가 더 많은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신영대 의원

공급망지원 강화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주로 기금채권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고위험 투자나 적극적 금리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트럼프 무역전쟁 등 전 세계적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맞물려 경제안보 이슈로 지속·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이차전지 등 소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들에게 대출, 보증, 투자 등을 지원해왔다. 최대 1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 가능한 기금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식의 한계로 전기차 캐즘 장기화나 주요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공급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대규모 출연금을 기반으로 한 기금 운용이 가능해져, 시장 금리보다 최소 1%p 이상 낮은 초저금리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고 고위험·장기 프로젝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에 더 싸고 빠르게 자금을 지원해 공급망 충격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차전지·반도체·AI 반도체 등의 사업은 소재, 부품, 장비라는 뿌리가 흔들리면 산업 전체가 설 자리를 잃는다”며,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직능단체와 정책간담회

전북의료기사연합회 등과 협력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의실에서 전북국악단체,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북지부,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전북의료기사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같은 날 원불교 전북교구청을 예방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논의됐다. 전북국악단체는 도립국악원 상임단원 확충, 전문문화 축제 예산 확대, 판소리·창극 전용 극장 건립을 요청했으며, 이원택 위원장은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는 민박시설 지원 예산 증액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위원장은 정책 분석과

협회의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는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공공기관 구매 확대를 제안했으며, 위원장은 관련 예산 복원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원불교 전북교구청에서는 종교평화회의의 재건과 협력을 요청했으며, 위원장은 지역과 종교 간 화합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료기사연합회는 의료기사 보수교육 및 면허 신고 관련 행정 지원을 요청했고, 위원장은 법적 근거 마련과 행정지도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난 21일 전북의료기사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회의를 하고 있다.

김영태 남원시의장, 미래농업 초청 토론회 발제 나서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사진)이 21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남원 미래농업 초청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남원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김 의장은 ‘균형있는 농업예산 수립 가능성?’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남원 농업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미래상에 대한 깊이 있는 화두를 던졌다. 먼저, 김 의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



의 강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 농업도 다양한 정책적 대응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인 농업예산의 축소와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남원시 농업예산의 균형과 혁신, 남원 미래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안에 나서 △농업 분야별 예산 배분의 조화 △농업인 예산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실질적 효과를 내는 사업 중심의 예산 운영 △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예산 확보 노력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장기적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주 기자

전북자치도, 내년 국비 확보 전면전 돌입

국회·정부부처 방문 잇따라

김종훈 경제부지사, 문체부

농식품부 찾아 현안 집중 건의

내일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도는 4월을 예산 편성·심의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 김관영 도지사와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1일 정부 추경에 도의 주요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22일부터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직접 중앙부처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도정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릴레이 활동에 들어갔다.

22일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국립모두에술품plex 건립 △동화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기록관 건립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조성 △호남권 전주 스포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츠카치센터 건립 등을 건의하며,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국가 식품클러스터 근로자 기숙사 건립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국산 맥류) △새만금 내부개발 등 농생명 분야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도는 오는 24일 지역 국회의원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를 본격 가동

할 계획이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의 주요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꼭 담길 수 있도록 도 지휘부가 직접 발로 뛰며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며 “정부부처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내용 등을 보강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환경교육도시의 미래 논하다

김정수 도의원, 환경교육도시 조성 토론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근 중요하게 다뤄지는 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토론회의 장이 익산에서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22일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환경교육 현안에 대해 관련 주제인 환경교육단체, 행정 등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협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선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발

표가 오고 갔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환경부 선정 환경교육도시는 광역지자체 곳(충청북도, 충청남도)과 기초지자체 4곳(서울은평구·서대문구, 경기 양평군, 경남 김해시) 총 6곳으로, 이들 지자체는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정돼, 현재까지 1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포문을 김인호(前)국가환경교육센터장이 열었다. 김 센터장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과 환경교육도시가 주는 도시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례 및 도시의 변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도시 조성 필요성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도시 추진 계획 △성공적인 환경교육도시로 가는 길 등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토론회의 장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정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교육도시의 역할과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다”라며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와 전북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